

【권두언】

『민주법학』 제81호를 내면서

엄순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경상국립대 교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2023년 3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 전쟁으로 다시 세계는 탈세계화와 신냉전에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3년 2월 한국의 검찰 권력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통령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하였다.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에게 0.73%(247,077명)의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의 경쟁자였던 사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수사 검사 60여 명)를 진행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체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세우고 싶어 하는 법치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현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 위기에 굴하지 않고 늘 오히려 더 도약했다. 이번에도 우리는 오늘의 위기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민주법학 제81호는 ‘특집1: 재난과 국가책임’으로 2편의 논문, ‘특집2: 과거사 해법의 모색’으로 3편의 논문, 그 외 7편의 일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집1 재난과 국가책임의 2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보드레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부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쟁점-”에서 정부당국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하여 책임 없다고 한 발표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국가는 이태원 헬러원 축제에 대하여 헌법과 법령, 행정지침 및 매뉴얼, 조리상의 포괄적·객관적·적극적이면서

도 중국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호영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임무와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에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책임자의 지위와 임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러한 법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어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특집2 과거사 해법의 모색에 실린 논문 세 편은 다음과 같다. 이재승은 “점령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미군정기 점령법원이 내린 하자 있는 유죄판결 극복방안을 모색하면서 점령법원에 의한 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군사점령 당시에도 국내법과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에서 폭넓게 반영되어 왔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규범 등을 주장하고, 오래전의 판결은 재심사유를 증명할 기록이나 증언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재심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례들의 유형 분류에 입각한 특별재심이나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관호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에서 조례안에 희생자 개념을 피해자 개념으로 정정하여 10·19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을 것과 유족대상자의 나이 한정을 없앨 것과 외국 거주자에게도 생활보조비 지급할 것과 시행일을 과도하게 미루지 말고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조례안으로 피해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을 이행하여, 10·19사건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승은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법관의 책임-대법원 2022. 8. 20.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그러한 처벌법의 적용이 위법하고 유책하며, 법관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유죄선고를 강요당한 것이 아닌 것임에도 당시에 유죄선고를 한 법관에 대하여 본 판결에서 법관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조의 대표자로서 공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다.

특집 이외의 논문 7편은 다음과 같다. 김민정은 “한국 민주주의와 국책 사업”에서 정부가 어떠한 목적으로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핵폐기장 건설사업,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사업의 국책 사업을 진행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우파 정부가 노골적으로 절차적 민주 제도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책 사업을 추진했다면, 개혁정부는 우파 정부보다 절차적 과정에서 민주적이지만 계속해서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개혁 정부의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은희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갱신요구권을 1회에서 3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면서, 주택의 매각을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로 추가하고, 그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것과 임대인이 거주 목적 갱신거절과 관련하여 현행 손해배상 청구에서 형사 처벌규정까지 둘 것을 주장하여 임대인의 거주 목적 갱신거절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인재는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산업의 대전환으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하여, 탄소중립 이행이 국내 산업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문별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측하며, 노동전환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와 수단을 다르게 설정할 것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입법과 노동전환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과 함께 노동전환 정책 추진에서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이러한 것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용인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신뢰의무와 손해배상”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가벼운 과실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부당하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이를 이용한 노동자에게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경영위험을 평가하여 책임귀속을 결정하여야 하며, 고의, 중과실이 없는 노동자

의 행위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승현은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에서 하도급에 관한 규제강화가 계약자유를 심하게 훼손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오히려 열악한 하수급인과 하수급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무너진 당사자 대등성 회복을 위하여 계약 통제의 법적 수단을 검토 개선하여 하도급 관행의 폐단을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소진과 김채운은 “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일본의 ‘재해여성학’을 중심으로”에서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것이고 특히 젠더 불평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젠더 관점의 재난관리 및 대응 체계 모색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해여성학’을 검토하여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계수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민주법학〉의 시선”에서 법과 문학 연구가 법률학의 형식주의에 포박되어 소설을 이용한 단순 케이스 풀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과 문학은 문학적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 못 생명의 삶과 고통에 공감하는 법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학적 정의 모색에 <레미제라블>이 공감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유용한 텍스트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복수와 원한감정이라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이 법의 기본정신이 되지 않도록 르상티망과 정의 사이의 갈등과 충돌 사이에 놓인 법의 딜레마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법학』 제81호의 출간으로 원고의 내용이 우리 사회를 더욱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생명체로 움직이기를 바란다. 소중한 원고를 투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원고의 심사를 해주신 분들, 제81호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오동석 편집위원장, 여러 편집위원과 편집실무위원, 출판사 관악사 신재일 사장과 직원들께도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